

“코펜하겐의 경험과 앞으로의 여정”

2010년 제 1회 UNGC 비즈니스 리더 조찬회
2010.01.28

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대사

코펜하겐 회의

- Copenhagen Accord (CA):
- 28 개국 정상의 2박 3일
- 주요국 정상이 직접 밤을 샌
역사상 유례가 없는 협상
- CA: 절반의 성공, UN 공식 승인 획득 실패
- 한국: 자율적 감축 방식 국제적 인정
Non-Annex 1 지위 기정 사실화
주요 배출국의 선도적 모델로 환영
전향적 국가로 국격 상승
28 개국 포함, 2번 정상 연설

Post-2012 기후 체제

- 한국: 선진국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?
구속력 있는 감축을 스스로 시행할 것이다
- 기후 변화: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?
새로운 성장 동력, 경제 살리기

우리나라: 개도국 or 선진국?

- 선진국: 자기 선언 방식,
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님
 - 지구문제 의무 부담 책임 수반
 - 우리 사회의 공론화를 통해
스스로 결정할 사항
- 우리: 역사적 책임 상이, 개발 수준 상이
- 그러나: 경제력에 상응한 자발적 감축

기후: 선진국 의무

- 과거 온실가스 배출: 현 기후변화 역사적 책임
- 구속적/절대량 감축 의무: 성장 보다 감축 우선
- 감축 목표치 수준: 여타 선진국의 용인 필요
- 선진국: 2020년까지 1990 수준의 25-40% 감축
- 개도국: 2020년까지 BAU 대비 15-30% 감축

선진국 의무를 질 것이다 ?

- 우리 국력에 상응하게 우리가 결정,
→ 선진국과 동일한 역사적 책임 부담?
- 남이 결정하여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님
→ 이를 허용하여서도 안됨
→ 우리 스스로 행동

협상 목표: 우리 자율성 확보

- Annex 1 이라는 인위적 기후 선진국 명단 비 편입: Non-Annex 1 지위 유지
- 감축 수준 자율성 / 지속 성장을 위한 Carbon Space 확보
- 선진 일류 국가: 미래 전략
- 기후 선진국: 과거 책임 문제

기후변화: 기본입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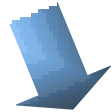
선진국

지난 150년간의 역사적 책임
2°C 상승 한도 내 절대량 감축

VS

한국

30 여 년 간의 책임 능력에
상응한 자발적 감축



감축 목표치 “자율성 확보”
선진국과 차별화된 새로운 참여 방식 설정

한국: “등록부 (Registry)” 제안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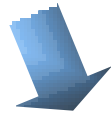
선진국 방식

Annex 1 절대량 감축
국제법 구속적 의무와 대비

VS

Registry

능력에 상응한 자발적 서약
국내법 구속적 이행
국제적 검증



한국

국제적 신뢰 확보 위한

적절한 감축 목표와 법적/제도적 기반 구축

COMMENTARY LETTERS

International Herald Tribun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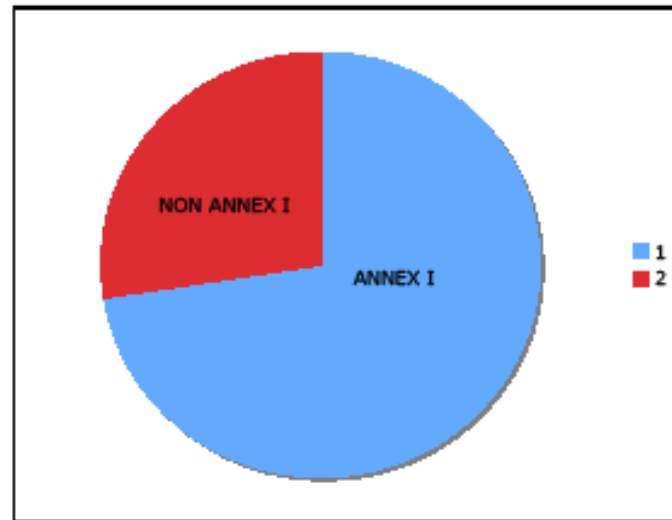
MONDAY, JULY 13, 2009

SMITHSONIAN MAGAZINE
© 200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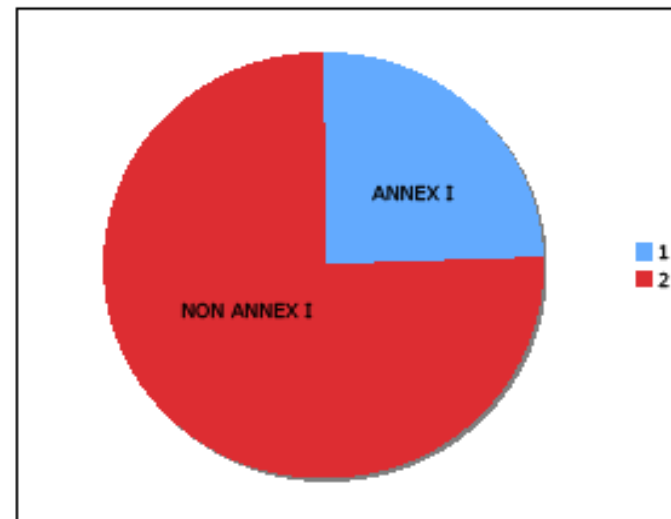


Past emissions

- Actual emissions 1850-2008



- Equal individual shares



Proposed emissions

- Proposed emissions 2009-2050



- Equal individual shares

